

교육

| 엄 준 용 |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분석 자문위원 (jyum94@korea.ac.kr)

▣ 정책동향

□ 제2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(2008. 5. 6)

- 제2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(위원장: 대통령)가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신규 민간위원 13명, 교육과학문화수석(간사)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개최됨.
- 이날 논의에서는 R&D 투자의 확대, R&D 자원배분·성과확산시스템의 선진화, 정부R&D의 중점투자분야 설정 등을 담은 「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」, 효율적 산업 R&D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목표로 전략적 투자, 네트워크형 기술혁신체제 구축방안 등을 담은 「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R&D 전략」, 「보건의료R&D 중장기 추진전략」, 「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」 등 총 4개의 안건이 상정·확정되었음.

□ 교육과학기술부, '08년도 「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」 시행계획 발표(2008. 3. 25)

- 교육과학기술부는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고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8년도 「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」을 추진한다고 밝힘.
 - 동 사업은 이공계 출신자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교육기회를 6개월간 제공함으로써 이공계 대졸인력의 취업을 지원하고, 현 인력의 기술수준과 산업현장의 기대수준과의 양적·질적 불일치(mismatch)를 해소하는 산업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
 - 동 사업은 '03년도부터 추진된 이래 2007년도까지 총 15,782명의 연수생을 선발하여 11,629명(73.7%)을 취업시킴으로써 청년실업 완화와 산업기술인력 공급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.

- 지원대상은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연수생과 연수기관임.
 - 연수생은 이공계 대졸(전문대 졸, 대학원 졸 포함) 미취업자로 만 32세 이하인 자(졸업예정자 포함)
 - 연수기관은 정부출연기관, 국공립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산학협력단, 지자체 및 기타 전문기술인력양성 비영리 기관
- 주요 지원 내용

구분		전문 연수	기업 연수
기간		6개월 내외(연수 교육 내용에 따른 탄력적 구성 가능)	
		4개월 내외	2개월 내외
지원	연수기관	교육운영관련 제반경비(전담인력 인건비, 강사료 등) 지원	
내용	연수생	연수수당 등(1인당 월 30만 원)	연수수당 등(1인당 월 50만 원)
연수규모		주관기관별 5~150명(최대연수인원은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)	
사업비		연수생 1인당 490만 원 내외 지원(정부지원금 및 민간현금출자금, 연수수당 포함), 단,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.	

- 교과부는 금년부터 단체연수를 전문연수로 통합하여 현장실무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관행에 적극 대처하여 연수생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

□ **교육과학기술부, 대입업무 이양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(2008. 4. 15)**

- 교육과학기술부는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, 「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」 및 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」(이하 협의회법) 일부 개정안을 4. 16(수)~5. 6(화)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

○ 주요 개정내용

<p>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·공표 권한 이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행령 개정(안) 제32조, 협의회법 개정(안) 제18조의2 - 교과부장관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권한을 삭제하고 협의회에서 회원대학과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「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」을 수립하도록 개정됨. - 이 때,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학년 개시일의 1년 9개월 전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본계획 공표시기를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하여, 협의회는 올해 8월 말까지 「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」을 수립하여 공표하게 됨.
<p>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 명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행령 개정(안) 제33조, 협의회법 개정(안) 제18조의3 - 각 대학은 협의회가 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학년 개시일의 1년 3개월 전(현행 1년 6개월 전)까지 「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」을 수립·공표하여야 함. - 협의회는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하여 위법·부당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여부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
<p>대학별 고사 심의 권한 이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행령 개정(안) 제35조, 협의회법 개정(안) 제18조의4 - 정부에서 대학별 고사를 심의하던 것을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고, 필요한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그 이행 여부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. - 입학사정관제도 등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이 정착되고, 대입전형요소가 합리적으로 활용되어 대입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협의회를 통해 자율 규제
<p>학생 선발일정 수립·공표 권한 이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행령 개정(안) 제41조 - 현재는 교과부장관이 대학의 학생 선발일정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협의회에서 대입전형 일정을 수립·공표하게 됨.
<p>대입 지원방법 위반자 심의·처리 권한 이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행령 개정(안) 제42조, 협의회법 개정(안) 제18조의5 - 종래에는 정부가 대입전형 일정에 위반하여 대학입학을 지원했거나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에 대해 심의하여 대학에 통보 하였으나, 앞으로는 협의회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게 됨.
<p>입학지원방법 관련 규정 통합·정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행령 개정(안) 제42조 -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, 제42조의2, 제42조의3이 대학·전문대학·산업 대학의 입학지원방법에 대해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세 조항을 통합·정비

□ 교육과학기술부, '08년도 학교기업, 66개교 선정 지원(2008. 4. 1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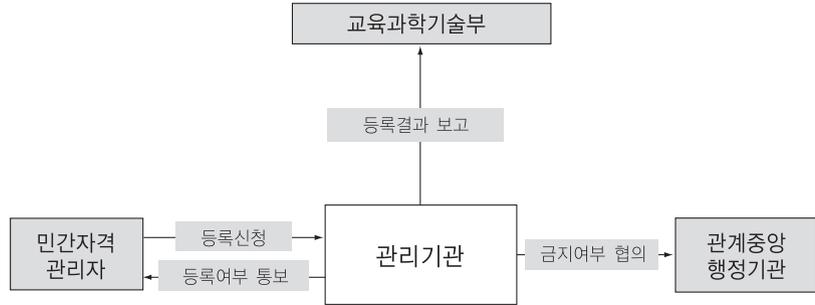
-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현장실습을 통한 우수 인재양성과 산업체 등에서의 기술이전 촉진, 학교기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대학의 재정수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제3기 『학교기업』 지원사업 선정학교를 4월 17일 확정·발표함.
- 「학교기업」은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가 직접 물품의 제

- 조 · 판매 · 수선 · 가공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수행하는 제도로 현재 171개 학교기업(대학교 52개, 전문대학 62개, 전문계고 57개)이 지원받고 있음.
- 제3기 학교기업 지원은 신규 학교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되, 기존 1·2기 재정지원 학교기업 중 인프라 구축이 성공적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
 - 학교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평가를 통해서 신규부문은 450백만 원~250백만 원, 기존부문은 150백만 원~50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임.
 -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인건비, 학교기업 현장실습비, 장비구축비, 학교기업 운영비 등을 일괄(Package)지원하고, 학교는 이를 학교기업의 육성을 위해 집행하게 됨.
 - 교육과학기술부는 '연간 8,000명 이상의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, 학교의 재정 자립도를 신장시키는 한편,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'으로 전망하고 있음.

□ **교육과학기술부, 민간자격 등록제 시행(2008. 5. 16)**

- 교육과학기술부(장관 김도연)는 오는 5월 26일부터 '민간자격 등록제'를 시행한다고 밝힘.
 - 민간자격 등록제란 '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하고 있는 관리자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'하는 제도임.
 - 작년 자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, 지난 4월말 관리기관 공모를 통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민간자격등록 관리기관으로 선정되었음.
- 민간자격 등록제는 민간자격 종목 및 민간자격 관리·운영기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, 체계적으로 관리·등록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민간자격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결격사유가 있는 민간자격기관의 양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임.
-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자격등록제 시행으로 민간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, 자격을 취득하려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, 민간자격의 허위·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그림1. 민간자격등록제 추진기관 및 역할



□ IMD, 2008년도 세계경쟁력 연차보고서 발표(2008. 5. 15)

- 교육과학기술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(IMD, 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)이 5월 15일 발표한 2008년도 「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서(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)」에서 우리나라의 과학 경쟁력이 세계 5위를 차지하여 지난 해보다 2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 - IMD는 1989년부터 국가별 경쟁력을 경제운영성과, 정부행정효율, 기업경영효율, 발전인프라구축 등 4대 분야별 세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, 총 순위 및 분야별 순위를 매년 발표하여 왔음
- 금년의 경우,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31위로 지난 해 보다 2단계 낮아졌으며, 교육 경쟁력은 35위로 평가되어 30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음.
 - 4대 부문별로는 경제성과 부문(49 → 47위) 및 기업효율성 부문(38 → 36위)은 개선되었고, 정부효율성 부문(31 → 37위), 인프라구축 부문은 전년 보다 다소 하락(19 → 21위)한 것으로 나타남.
 - 세부 분야별로 보면, 고용(15위), 공공재정·재정정책(각각 18위), 과학·기술 인프라 분야(각각 5, 14위)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위 수준이었지만, 외국인투자(50위), 물가(52위), 기업규제(50위), 사회적 인프라(53위) 분야들은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.

표1. 연도별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

구분 \ 연도	2004	2005	2006	2007	2008
대상국/지역	60개	60개	61개	55개	55개
□ 국가경쟁력	35(31)	29(27)	38(32)	29	31 (▽ 2)
· 경제운영 성과	49(41)	43(38)	41(36)	49	47 (▲ 2)
· 정부행정 효율	36(32)	31(28)	47(41)	31	37 (▽ 6)
· 기업경영 효율	29(25)	30(27)	45(38)	38	36 (▲ 2)
· 발전인프라 구축	27(24)	23(20)	24(22)	19	21 (▽ 2)
- 과학경쟁력	19	15	12(10)	7	5 (▲ 2)
- 기술경쟁력	8	2	6(6)	6	14 (▽ 8)
- 교육경쟁력	44(38)	40(34)	42(37)	29	35 (▽ 6)

주: ▲, ▽은 전년대비 순위 상승, 하락을 의미
*괄호안은 IMD에서 55개국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발표한 순위임.

연구동향

□ 교육과학기술부, 대학교원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(2008. 5. 8)

- 교육과학기술부는 5월 8일(목) 2007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대학교원 현황을 발표
- 2007년도 대학교원의 총수는 전년대비 2,072명(전임 1,833명, 겸임 156명, 초빙 46명)이 늘어난 64,533명(전임 57,176명, 겸임 4,680명, 초빙 2,697명)이며, 교원 확보율은 전년대비 0.7% 증가한 77.2%로 개선되었다고 밝힘.
 - 이 가운데 사립대학 교원은 77.3%에 해당하는 48,207명이며, 국·공립대 교원은 16,346명(국립 15,669명, 공립 677명)이다.
 - 교원 1인당 학생수(재학생 기준)는 27.2명으로 전년도의 27.6명에 비해 0.6명이 개선되었으나, 여전히 OECD 평균(15.5명) 및 주요 국가 수준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실정이므로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.
 - 계열별 교원 확보율은 의학계열이 168.7%로 가장 높고, 공학계열은 65.6%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.
 - 여성 전임교원은 총 9,840명으로 전년도 보다 616명이 증가하여 전체 전임교원의 17.27%('06년 16.7%)를 차지하고 있으며, 전체 교원증가를

(3.3%)대비 여성교원의 증가율(6.7%)이 2배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국제 전문인력 양성 및 학문의 국제화 기반 마련 등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외국인 교수는 2,301명으로 전년대비 223명이 증가하여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.
- 교원의 확충과 아울러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학부 입학정원의 감축으로 인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매년 감소되고 있음.
- 이러한 교원여건의 향상은 '05년 이후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, 대학 재정지원 사업시 교원확보율을 참여조건으로 제시하거나 평가지표로 활용함에 따라 대학에서 전임교원을 많이 채용하고, 학생정원을 감축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.
-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별·계열별 교원확보현황을 홈페이지(www.mest.go.kr)를 통해 공개하여 학생·학부모의 대학선택을 지원하는 한편,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할 계획임.

□ **교육과학기술부, 연구자 중심의 국가 R&D 관리제도 개편(2008. 5. 20)**

-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보다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(Researcher-Friendly)의 국가 R&D 관리제도 개편을 단행.
 - 지금까지의 국가 R&D사업 관리제도는 공급자 위주로 구성·운영되어 연구자가 국가 R&D사업을 수행할 경우 연구관리기관에 실적 제출, 보고, 승인 요청 등 비연구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고, 이로 인해 창의적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에 몰두해야 하는 연구자가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음.
 - 이번 국가 R&D사업 관리제도 개편의 기본원칙은 고객(연구자) 관점에서 연구관리 규제의 폐지 혹은 대폭 완화, R&D사업 추진상의 비효율적 요인을 적극 발굴·개선,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책임성 확보 등으로 압축할 수 있음.
- 주요내용
 - 대학 기술료의 정부납부 폐지
 -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조정
 - 사업관리 프로세스 효율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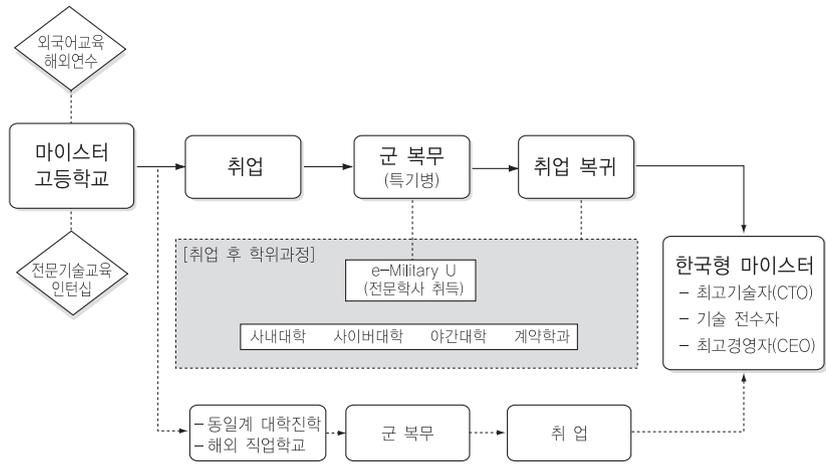
- 연구관리체계의 간소화
-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
- 기대효과
 - 국가 R&D사업의 효율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, 연구자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촉진하여 보다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됨.
 -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(부령)」 개정 및 「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(훈령)」 제정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

□ **교육과학기술부,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육성방안 공청회 개최(2008. 6. 13)**

-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기획 연구팀(책임자 장명희, 한국 직업능력개발원)과 함께 ‘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운영방안’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.
 - ‘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육성방안’은, 학생의 특기·적성을 살려서 특화된 분야의 영 마이스터(Young Meister)로 육성할 수 있는 우수 전문계 고교 5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새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정과제로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기획단 구성·운영을 의뢰하여 시안을 마련해 왔음.
 - 연구팀은 전국 702개 전문계 고교 설문조사, 16개 시·도 교육청 협의회(3회), 자동차·전자·조선·철강·기계·미용·조리 등 산업계 관계자 협의회 등을 거쳐 학교현장 및 산업계의 수요를 분석한 결과,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에 대한 단위학교의 수요는 매우 높으며(55.8%), 시·도 교육청과 산업계 역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고 보고함.
-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운영 방안’에 대한 주요 제안 내용
 - Career Path: 우선,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취업 → 군복무(특기병) → 취업 복귀를 거치면서 학위 취득을 병행하여 최고기술자(CTO)/기술전문자/최고경영자(CEO)인 한국형 마이스터로 성장하는 경력개발 경로를 설정하고, 산업계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입대연기, 특기병 근무 등 군복무제도 개선과 직장 내 학위취득이 용이하도록 사내대학·계약학과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제안

- 학교 규제 개혁: 마이스터고 운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자율화, 개방형 학교장 공모, 전국단위 학생모집 등에서의 단위 학교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.
- 행·재정적 지원: 마이스터고 기반조성 비용과 운영비용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국가차원의 충분한 지원방안 수립 필요성을 제안.

그림2. 마이스터고 졸업생 Career Path



❖ 교육비 동향

□ 2008년 1/4분기 월평균 교육비, 전년 동기 대비 7.7% 증가

- 2008년 1/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.2% 증가한 250만 9천 원으로 나타남.
- 2월평균 교육비는 36만 9천 원(소비지출 대비 14.7%)으로 전년 동기 대비 7.7% 증가

표2.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총액 대비 교육비 지출

단위: 천 원, 전년 동기 대비, %

구 분	2006 1/4			2007 1/4			2008 1/4		
	구성비	증감률		구성비	증감률		구성비	증감률	
소비지출	2,269.5	100.0	3.8	2,362.3	100.0	4.1	2,508.9	100.0	6.2
실질									
교육	330.0	14.5	9.2	342.7	14.5	3.8	369.1	14.7	7.7

주: 도시근로자가구 기준, 실질소비지출 = (소비지출)/(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)×100.
 자료: 통계청, 『가계조사(가계수지)』, 각 호.

- 2008년 1/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39만 1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.2%가 증가하였고, 교육비를 구성하는 전 항목이 전년 동기 와 비교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동분기 월평균 교육비 지출 중 보충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.3%(전년 동기 대비 17.9% 증가)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납입금은 45.0%(전년 동기 대비 8.9% 증가)로 그 뒤를 이음.

표3.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내역 추이

단위: 천 원, 전년 동기 대비, %

구 분	2006 1/4			2007 1/4			2008 1/4		
	구성비	증감률		구성비	증감률		구성비	증감률	
교육	325.5	100.0	4.2	345.3	100.0	6.1	391.0	100.0	13.2
- 납입금	140.1	43.0	-8.5	161.8	46.9	15.5	176.1	45.0	8.9
- 교재비	12.3	3.8	-10.2	12.2	3.5	-0.4	13.6	3.5	11.5
- 보충교육비	168.4	51.7	19.3	166.7	48.3	-1	196.6	50.3	17.9
- 문구류	4.7	1.5	4.7	4.5	1.3	-3.9	4.6	1.2	1.3

주: 도시근로자가구 기준,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.
 자료: 통계청 가계조사 DB(<http://kosis.nso.go.kr>).

- 2008년 1/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보충교육비 지출을 살펴보면, 자녀 의 과외비를 나타내는 학원 및 개인교습비는 전년 동기 대비 18.6% 증가한 19만 6천 원, 기타 보충교육비는 전년 동기 대비 13.1% 증가한 1만 3천 원으 로 나타남.

표4. 보충교육비 지출 현황

단위: 천 원, 전년 동기 대비,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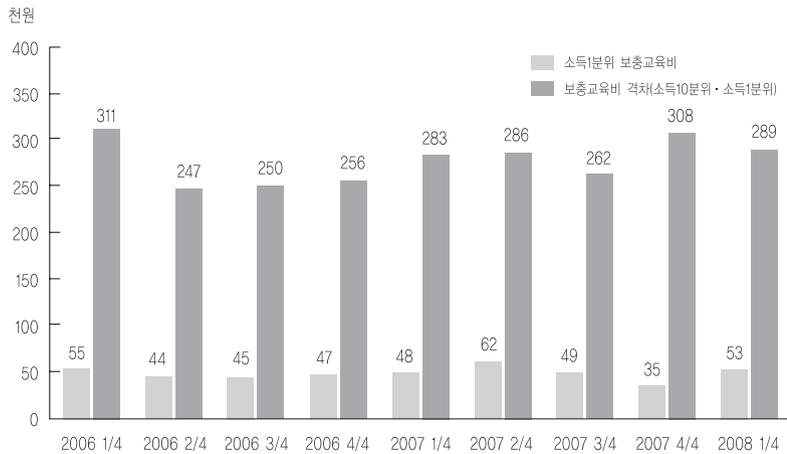
구 분	2006 1/4		2007 1/4		2008 1/4	
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
보충교육비	168.4	19.3	166.7	-1	196.6	17.9
- 학원 및 개인교습비	149.6	20.9	154.7	3.4	183.6	18.6
- 기타 보충교육비	18.8	7.7	12.0	-36.3	13.1	8.8

주: 도시근로자가구 기준.
 자료: 통계청 가계조사 DB(http://kosis.nso.go.kr).

□ 소득 분위별 교육비 격차, 소득 최상위(10분위)가 최하위(1분위)의 약 7.4배

- 2008년 1/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최하위 10%(1분위) 계층의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소비지출(133만 3천 원)의 2.6%인 15만 6천 원, 소득 최상위 10%(10분위) 계층은 월평균 소비지출 477만 7천 원의 7.2%인 72만 3천 원을 교육비로 지출함.
- 10분위와 1분위의 교육비 지출액 격차는 56만 7천 원으로, 10분위의 교육비 지출이 1분위 4.6배로 나타남.
-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분위별 보충교육비는 10분위 34만 3천 원, 1분위 5만 3천 원 으로 28만 9천 원의 격차를 보였으며(10분위가 1분위의 약 6.4배), 이는 전년 동기(28만 3천원) 대비 6천 원(2.1%)이 증가한 것임(그림 3).

그림3. 소득 분위별 보충교육비 격차



주: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.
 자료: 통계청 가계조사 DB(http://kosis.nso.go.kr).

□ 교육물가지수

○ 2008년 5월 교육물가 지수는 118.1로 전월 대비 0.1%, 전년 동월 대비 5.4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(5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.8%, 전년 동월 대비 4.3% 상승).

표5. 교육물가지수 추이

(2005=100)

연도	2007											2008				
	3	4	5	6	7	8	9	10	11	12	1	2	3	4	5	
총 지수	104.1	104.5	104.6	104.6	105.0	105.1	105.7	105.9	105.9	106.3	106.8	107.2	108.2	108.8	109.7	
교육	111.7	111.9	111.9	111.9	112.0	112.1	112.1	112.2	112.2	112.4	112.9	113.1	117.7	118.0	118.1	

자료: 통계청, 소비자물가지수 DB(<http://kosis.nso.go.kr>).